

2020. 04 제158호 (20-03)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인식과 과제

김 영 혜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3.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과 정책인식
4. 시사점과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분석」제158호(20-03)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0년 4월 6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 쇄 디자인펌킨 031)893-8316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음.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22)

요 약

○ 주관적 계층의식의 정의

- 주관적 계층의식이란 개인이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여 특정 계층 지위에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객관적 계층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 생활여건이 특정 계층이어도 주관적인 인식이 그렇지 않을 수 있음.

○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20.5%는 하위층, 75.2%는 중간층, 4.3%는 상위층이라 응답하여 도민 4명 중 3명은 자신을 중간층이라 생각하고 있음. 전반적인 주관적 계층의식은 전국과 비교해 높게 나타남.
- 하위층 귀속감을 가진 경우는 특징적으로 무작·판매서비스·작·기타직업, 소득이 낮은 집단, 그리고 경기북부 거주자가 높게 나타남.

○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사회인식

-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 일관되게 부정적인 사회인식 가지고 있고 상위층은 가장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보임. 특히 ‘포용사회’에 대한 하위층과 상위층의 인식격차가 가장 컸음.

○ 사회계층별 차별경험과 정책인지도

- 하위층은 차별경험 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지만 중간층 또한 13.1%로 하위층에 못지않은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음. 하위층은 이러한 높은 차별경험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별해소정책 및 사회적 논의에 대한 인지도가 타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음.

○ 사회계층별 정책지지도

-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 상위층은 장애인의 무고용제도,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난민수용문제에 대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선명함. 반면에 중간층의 정책 찬성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시사점

- 차별해소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인 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며, 다양한 계층별로 활발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함.

목 차

1. 들어가며	1
2.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2
가. 주관적 계층의식의 정의	2
나.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3
다.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사회인식	7
3.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과 정책인식	9
가.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	9
나.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해소정책 인지도	10
다.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해소정책 지지도	12
4. 시사점과 과제	14

1. 들어가며

-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각종 정책 결정이나 사회 안정 및 발전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따라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각 분야 경기도정책의 수립에서 필수적인 사안일 것임.
- 최근 들어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차별은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등 개인의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이유로 일상생활,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함. 일찍이 우리사회에서 성차별, 비정규직 문제, 외국인노동자 혐오문제가 있어왔고, 가장 최근에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제주도 난민수용문제 등을 통해 중심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임.
- 일부 종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국가인원위원회가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상정을 하겠다고 한 바 있음.¹⁾ 따라서 올해는 차별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런데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회구성원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인의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종교 등의 변수에 따라 사회적 견해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임. 본 글에서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사회과학에서 계층은 성이나 연령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여겨져 왔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성장의 정체,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사회이동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임.
- 이에 본 글에서는 2019년 본원 설문조사 자료²⁾를 활용하여 첫째, 경기도민의 사회계층을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계층별 사회인식과 차별에 대한 경험 및 차별해소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후에, 셋째,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경향신문 2020년 3월 9일자 보도 [단독] 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 본 글에서 활용할 자료는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민의 차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조사한 경기도민 1,082명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임.

2.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가. 주관적 계층의식의 정의

- 계층은 경제지표를 통해 구조화할 수 있는 ‘객관적 계층’ 과 개인의 계층 귀속감을 의미하는 ‘주관적 계층의식’ 으로 구분됨. 객관적 계층은 대다수 연구에서 소득³⁾ 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알려진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 통계청에서도 이 정의를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정책의 주요목표 설정 시 활용하고 있음.
 - 미국 센서스국 및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이상~200%미만, 그리고 중위소득 200%이상의 세단계로 계층을 구분하기도 함.
- 본 글에서 다룰 주관적 계층의식은 객관적 계층과는 달리 개인이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여 특정 계층지위에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이병훈·윤정향, 2006)⁴⁾.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계층에 따른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객관적인 생활여건이 특정 계층의 수준을 유지하여도 주관적인 인식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객관적 계층 분포와는 별도로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귀속감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⁵⁾
- 김병조(2000)⁶⁾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를 계층관에 대한 연구와 계층성향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함. 계층관에 대한 연구는 사회구성원이 계층현상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자신을 계층구조 속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의 연구이고, 계층성향에 대한 연구는 특정계층이 어떤 의식, 예컨대 사회의식, 정치의식 등을 갖고 있는 가를 연구하는 것임.
- 본 글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경기도민의 계층성향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소득이 아닌 소비지출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인 경우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기도 함.

4)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70. 111-140.

5) 또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귀속의식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6)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sum). 241-268.

나.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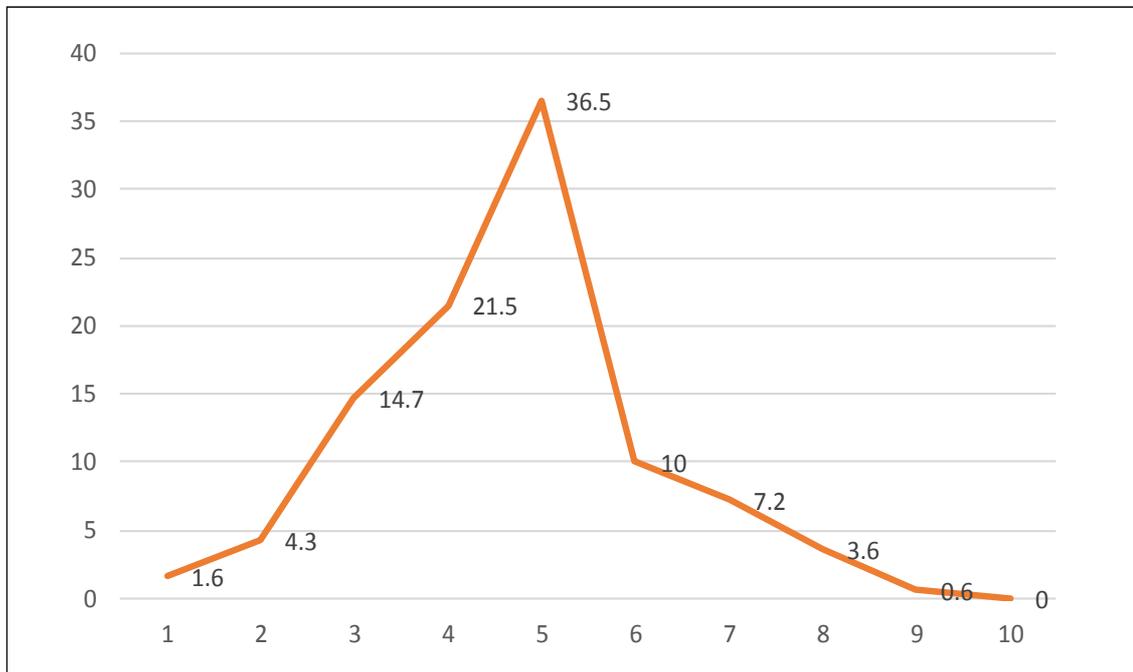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는 전국에 비해 하위층 비율은 낮고 중하층과 중간층의 비율은 유사하며 (중)상위층은 높게 나타나고, 도민 4명 중 3명은 자신을 중간층이라 생각”

“하위층 귀속감은 무직·판매·서비스·작·기타·직업,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그리고 경기북부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그림 1>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현재 본인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최하층 1점부터 1점씩 증가하여 최상층 10으로 표시하게 한 결과를 나타낸 것임. 10점 만점에 중위값인 5점이 가장 많아서 36.5%이고, 그 다음은 4점으로 21.5%이며, 3점이 14.7% 순으로 나타남. 최상층에 해당하는 10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음.

<그림 1> 경기도민의 계층 귀속의식 (10단계)

(단위 : %, N=1,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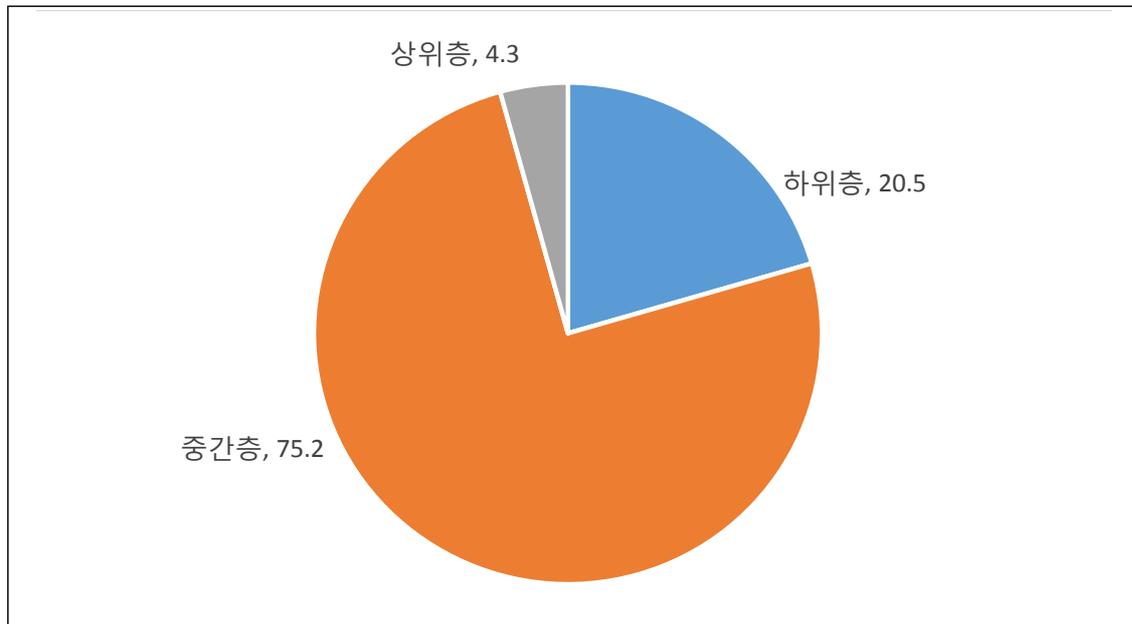


자료 : 김영혜·이은아·박효민. 「경기도민의 차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 한편 <그림 1>에 나타난 경기도 조사결과를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⁷⁾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 조사와 비교하면, 전국조사에서는 유사한 문항⁸⁾에서 하층 14.2%, 중하층 36.4%, 중간층 43.1%, 중상층(상층포함) 6.3%로 나타났는데, 경기도 조사를 이와 같이 5단계로 제시하면, 하층 5.9%, 중하층 36.2%, 중간층 46.5%, 11.4%(상층포함)으로 정리됨.
 - 즉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하층 비율은 낮고 중하층과 중간층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며, 중상층(상층포함)은 높아서, 전반적인 주관적 계층의식이 전국과 비교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그림 1>의 결과를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 결과가 <그림 2>에 나타나 있음. 즉 1~3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하위층’, 4~7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중간층’, 그리고 8~10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상위층’ 이라고 구분하였음. 그 결과 경기도민의 약 4명 가운데 3명인 75.2%는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가 하위층이라고 답한 경우는 20.5%,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위층이라는 응답은 불과 4.3%로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경기도민의 계층 귀속의식 (3단계)

(단위 : %, N=1,082)



7) 정해식·김미곤·여유진·전진아·김문걸·우선화·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이 조사의 질문은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__님 님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

- 한국사회는 1960~1970년대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그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중간층 귀속의식이 매우 높아져 70~80%에 달하였음.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간층 귀속의식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경기도의 중간층 계층의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경기도민의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및 거주지역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이 하위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많고, 반면에 자신이 상위층에 속한다라는 응답도 많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즉 남성은 자신을 계층의 양극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70대의 경우 타연령대보다 자신이 하위층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40대와 20대는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높고, 60~70대와 50대에서 자신이 상위층이라는 응답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60~70대는 하위층이라는 응답과 상위층이라는 응답 모두 타 연령대보다 높았고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음.
-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한 응답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음. 그런데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 집단은 자신이 상위층이라는 응답도 타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적임. 즉 이들 집단은 자신의 계층이 양극단에 속한다는 생각이 타교육수준 집단보다 높음. 한편 대학원이상 교육수준 집단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 없음, 판매서비스직, 그리고 기타의 직업종사자는 하위층이라는 응답이 타직업군보다 높고, 생산현장직과 사무관리직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또한 상위층이라는 응답은 학생과 기타직업인 경우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은 객관적 계층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임.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하위층이라는 응답이 높아서 200만원 미만 집단은 절반이 넘는 52.0%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함. 소득이 500~7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인 집단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상위층은 7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타 소득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았음.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권의 경우 남동권과 남서권에 비해 하위층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남동권은 중간층과 상위층이라는 응답이 타 권역보다 높았음.

<표 1>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 % 명)

구분		하위층	중간층	상위층	계
성	남성	22.2	72.7	5.1	100.0 (554)
	여성	18.8	77.8	3.4	100.0 (528)
	전체	20.5	75.2	4.3	100.0 (1,082)
연령	20대	16.3	80.3	3.4	100.0 (178)
	30대	26.1	71.4	2.5	100.0 (203)
	40대	15.2	82.4	2.3	100.0 (256)
	50대	20.2	74.1	5.7	100.0 (247)
	60~70대	25.8	66.7	7.6	100.0 (198)
	전체	20.5	75.2	4.3	100.0 (1,08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9	42.9	14.3	100.0 (7)
	고등학교 수준	27.0	70.4	2.5	100.0 (159)
	대학교 수준	20.1	75.5	4.4	100.0 (771)
	대학원 이상	14.5	80.7	4.8	100.0 (145)
	전체	20.5	75.2	4.3	100.0 (1,082)
직업	전문직	17.0	78.3	4.7	100.0(106)
	사무·관리직	17.6	79.5	2.9	100.0(517)
	생산·현장직	15.4	84.6	-	100.0(39)
	판매·서비스직	34.1	65.9	-	100.0(44)
	전업주부	19.2	73.7	7.2	100.0(167)
	자영업	21.6	73.0	5.4	100.0(74)
	학생	13.6	77.3	9.1	100.0(44)
	직업없음	43.3	50.7	6.0	100.0(67)
	기타	37.5	54.2	8.3	100.0(24)
	전체	20.5	75.2	4.3	100.0(1,08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2.0	48.0	-	100.0(75)
	200~500만원 미만	27.3	70.8	1.9	100.0(524)
	500~700만원 미만	10.3	85.1	4.6	100.0(282)
	700만원 이상	5.5	83.1	11.4	100.0(201)
	전체	20.5	75.2	4.3	100.0(1,082)
지역	남동권	18.1	76.4	5.5	100.0 (458)
	남서권	21.3	75.1	3.5	100.0 (342)
	북부권	23.4	73.4	3.2	100.0 (282)
	전체	20.5	75.2	4.3	100.0 (1,082)

다.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사회인식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일관되게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상위층은 가장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보여”

- <표 2>는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인식을 나타낸 것임. 각각의 사회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에 1점부터 가장 긍정적인 모습에 10점을 부여한 설문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음.
 - ‘포용사회’에 대한 문항은 차별과 소외가 심한사회(1점)~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 ‘신뢰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1점)~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10점), ‘역동적 사회’는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1점)~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10점), ‘희망사회’는 경제적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1점)~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10점), 끝으로 ‘협조사회’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1점)~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점)로 이 다섯 항목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대로 나타남.⁹⁾
- 이 결과를 사회계층별로 살펴보면 계층별로 상이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이 야기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음. 즉 ‘포용사회’, ‘신뢰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사회’, 그리고 ‘협조사회’의 모든 항목에서 하위층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층은 그 다음이며, 상위층의 경우는 세 계층 중 평균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임.
-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는 ‘희망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3.56점에 불과하고, 상위층은 포용사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음.
- 아울러 하위층과 상위층의 격차를 보면 ‘역동적 사회’는 양 계층 간의 점수차이가 0.58점으로 가장 적은 반면, ‘포용사회’의 경우는 하위층 3.86점, 상위층 5.00점으로 양 계층 간의 격차가 1.14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즉 차별과 소외에 대한 계층간의 사회인식 격차는 다른 영역에 비해 컸음.

9)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사회에 대한 인식은 포용사회 3.79점, 신뢰사회 3.80점, 역동적 사회 4.03점, 희망사회 3.76점, 그리고 협조사회 3.85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본 경기도 조사결과보다 낮은 수준임.

Ⅱ 이슈분석 Ⅱ

-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귀속감에 따라 상이한 사회인식의 경향이 존재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도의 각종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줌.

<표 2>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차이검증
포용사회	하위층	3.86	1.738	222	F=18.100 p≤.001
	중간층	4.58	1.683	814	
	상위층	5.00	2.181	46	
	전체	4.45	1.745	1,082	
신뢰사회	하위층	4.06	1.762	222	F=7.523 p≤.001
	중간층	4.53	1.733	814	
	상위층	4.87	2.400	46	
	전체	4.45	1.783	1,082	
역동적 사회	하위층	4.29	1.856	222	F=8.762 p≤.001
	중간층	4.85	1.730	814	
	상위층	4.87	2.277	46	
	전체	4.73	1.795	1,082	
희망사회	하위층	3.56	2.168	222	F=8.395 p≤.001
	중간층	4.18	1.974	814	
	상위층	4.28	2.316	46	
	전체	4.05	2.044	1,082	
협조사회	하위층	3.66	1.756	222	F=13.371 p≤.001
	중간층	4.35	1.814	814	
	상위층	4.59	2.400	46	
	전체	4.22	1.851	1,082	

주 각각의 사회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에 1점부터 가장 긍정적인 모습에 10점을 부여한 설문 응답 결과를 환산함.

3.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과 정책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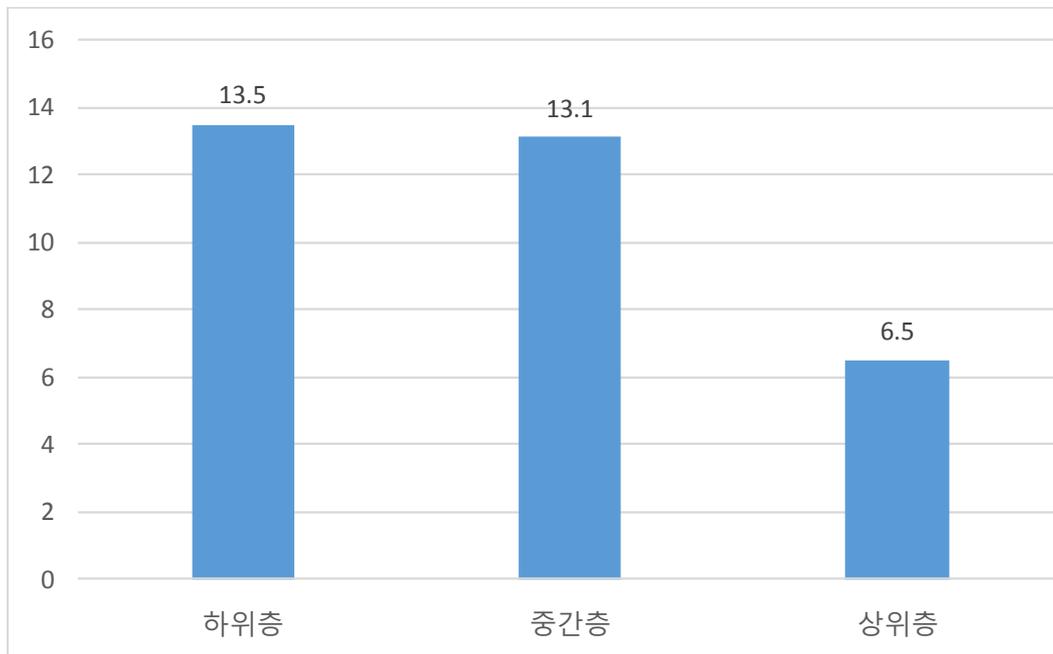
가.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 차별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중간층 또한 하위층에 못지않은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어”

-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 있음.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에 차별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13.5%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중간층 또한 차별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13.1%로 하위층보다 근소한 차이로 적었음. 즉 중간층이 경험한 차별도 하위층에 못지않게 많음을 알 수 있음. 반면에 상위층의 경우는 응답자의 6.5%만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그림 3>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경험

(단위 : %, N=1,082)



나.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해소정책 인지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 높은 차별경험 비율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별해소정책 및 사회적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 경기도민의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해소정책과 법 및 사회적 논의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음(〈표 3〉 참조).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57.7%)이고, 그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53.2%)이며, 난민에 대한 인도적 수용 논의(32.8%),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24.9%),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14.6%),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5.3%) 순으로 나타남.
- 이 결과를 사회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하위층의 경우 ‘모른다’ 는 응답이 38.7%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하위층의 10명 중 약 4명은 이 논의를 알지 못하였음. 상위층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와 ‘알고 있다’ 는 응답이 타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¹⁰⁾ 제정 논의도 하위층은 모른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위층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와 ‘알고 있다’ 에서 다른 계층보다 높았음.
-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하위층의 경우 ‘모른다’ 는 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는 응답은 중간층이 높았으며, ‘알고 있다’ 는 응답은 상위층이 가장 높았음. 정책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또한 하위층의 7.7%가 ‘모른다’ 고 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하위층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는 응답도 46.4%로 가장 높았음. 이 정책을 ‘알고 있다’ 고 한 응답은 상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최근 들어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하위층의 경우 ‘모른다’ 는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는 응답도 45.9%로 가장 높았음. 상위층은 ‘알고 있다’ 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끝으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수용 논의에 대해서도 ‘모른다’ (14.9%)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55.4%)는 하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위층은 ‘알고 있다’ 는 응답이 타 계층보다 높게 나타남.¹¹⁾

10) 해당 조례안은 2019년 3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임.

11)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음.

- 모든 차별해소정책과 법 및 사회적 논의에서 하위층은 ‘모른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상위층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 결과로 하위층을 비롯해 각종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표 3> 차별해소정책 · 법 및 논의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명)

구분		하위층	중간층	상위층	전체	차이검증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	모른다	38.7	26.7	17.4	28.7	$\chi^2=17.538$ $p \leq .01$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49.5	58.5	58.7	56.7	
	알고 있다	11.7	14.9	23.9	14.6	
	계	100.0 (222)	100.0 (814)	100.0 (46)	100.0 (1,082)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	모른다	70.3	62.3	54.3	63.6	$\chi^2=12.075$ $p \leq .05$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27.0	32.2	32.6	31.1	
	알고 있다	2.7	5.5	13.0	5.3	
	계	100.0 (222)	100.0 (814)	100.0 (46)	100.0 (1,082)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모른다	38.7	31.7	23.9	32.8	$\chi^2=15.136$ $p \leq .01$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40.1	43.6	30.4	42.3	
	알고 있다	21.2	24.7	45.7	24.9	
	계	100.0 (222)	100.0 (814)	100.0 (46)	100.0 (1,08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모른다	7.7	5.4	4.3	5.8	$\chi^2=19.298$ $p \leq .001$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46.4	34.6	21.7	36.5	
	알고 있다	45.9	60.0	73.9	57.7	
	계	100.0 (222)	100.0 (814)	100.0 (46)	100.0 (1,08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른다	9.0	7.4	4.3	7.6	$\chi^2=12.777$ $p \leq .05$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45.9	38.2	23.9	39.2	
	알고 있다	45.0	54.4	71.7	53.2	
	계	100.0 (222)	100.0 (814)	100.0 (46)	100.0 (1,082)	
난민에 대한 인도적 수용	모른다	14.9	14.0	8.7	14.0	n.s.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55.4	52.9	47.8	53.2	
	알고 있다	29.7	33.0	43.5	32.8	
	계	100.0 (222)	100.0 (814)	100.0 (46)	100.0 (1,082)	

다. 경기도민의 사회계층별 차별해소정책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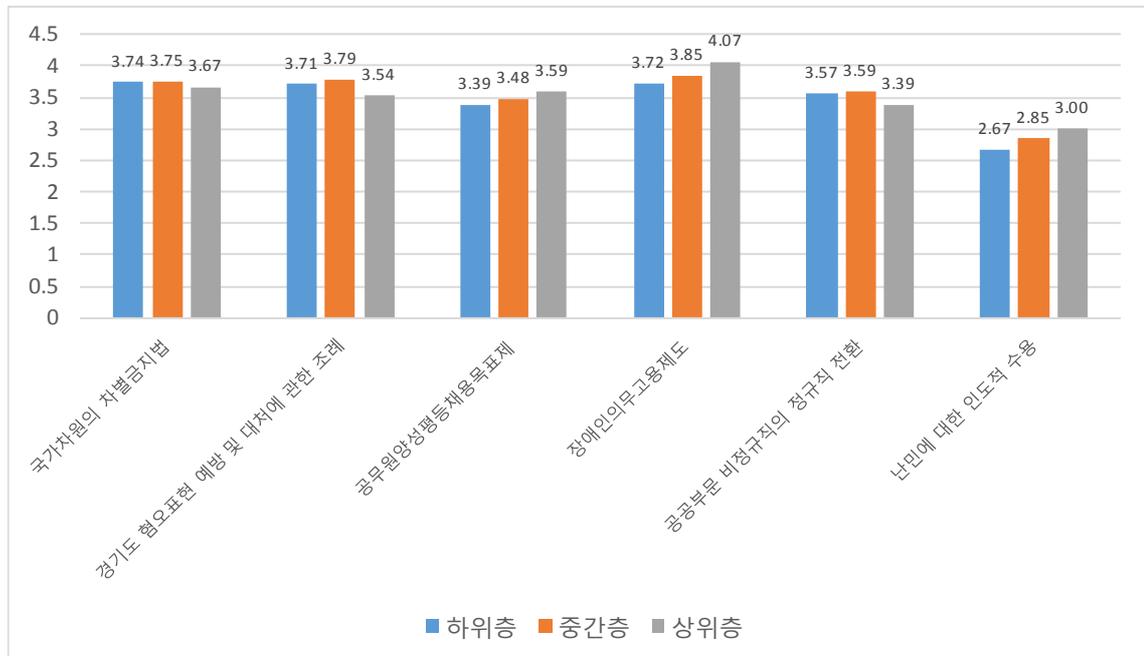
“하위층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위층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난민수용문제에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하위층과 상위층은 차별해소정책에 대한 지지정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중간층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 <표 3>에 제시된 차별해소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찬성정도를 계층별로 알아보았음(<그림 4> 참조). 먼저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하위층이 3.74점으로 찬성도가 가장 높았고, 중간층, 상위층 순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또한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하위층의 정책 찬성도가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층과 상위층이 뒤를 잇고 있음.
- 중간층은 경기도 혐오표현 및 대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찬성 정도가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위층의 경우도 3.71점으로 중간층에 이어 높고, 상위층의 찬성 정도가 가장 낮았음.
- 상위층은 몇몇 차별해소정책에 대해 높은 찬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즉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 상위층은 3.54점의 가장 높은 찬성 정도를 보이고, 중간층은 두 번째로 높은 찬성도이며, 하위층의 찬성도는 가장 낮았음.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는 상위층이 4.07점으로 4점이 넘는 높은 찬성정도를 나타냈고, 중간층, 하위층 순으로 찬성도가 높았음.
- 난민에 대한 수용문제는 다른 정책에 비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정도가 낮게 나타남. 그 중에서 상위층의 찬성 정도는 3.00점으로 세 계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간층, 하위층 순으로 이어짐.
- 하위층은 모든 차별해소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도에 있어 일정한 경향을 보였음. 즉 하위층은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높은 찬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차별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포용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또한 노동조건은 직접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흥미로운 것은 중간층으로, 이들 중간층은 가장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사회인식 측면이나 차별해소정책 견해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았음. 향후 경기도 중간층의 정체성과 내부 다양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위층인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차별해소 관련 정책인지도 또한 높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그리고 난민수용문제 등에서 타계층에 비해 높은 찬성정도를 보여주었음.
- 즉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차별경험과 정책인지도가 상이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림 4> 차별해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찬성도

(단위 : %, N=1,082)



1) 찬성도 점수는 '절대 반대' 1점, '반대 하는 편' 2점, '보통' 3점, '찬성하는 편' 4점, 그리고 '매우 찬성'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4. 시사점과 과제

“차별해소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 관련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며, 나아가 다양한 계층별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의 마련 필요”

- 경기도민의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는 전국과 비교하면 하위층 비율은 낮고 중하층과 중간층의 비율은 유사하며 (중)상위층은 높게 나타남. 즉 전반적으로 경기도민의 계층의식이 높게 나타나서 도민 4명 중 3명은 자신을 중간층이라 생각하고 있음.
 - 세 계층 중 하위층의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하위층은 직업이 무직·판매서비스·작·기타직업인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그리고 지역별로는 경기남부보다는 경기북부권에서 귀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계층귀속감에 따라 ‘포용사회’, ‘신뢰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사회’, 그리고 ‘협조사회’에 대한 뚜렷한 사회인식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일관되게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고, 상위층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음. 특히 ‘포용사회’의 경우는 양 계층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서 차별과 배제에 대한 하위층의 생각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 각종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 한편 하위층은 일상생활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간층도 하위층에 못지않게 차별을 당했다는 경험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상위층의 차별경험 비율은 가장 낮아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차별경험이 상이하게 나타남.
-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위층의 경우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차별해소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낮다는 것임. 모든 차별해소관련 정책·법 및 사회적 논의에서 하위층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인 경우에 차별해소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는 높게 나타났음. 예컨대 차별경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듯 국가차

원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개인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높은 찬성도를 보여주었음.

- 선행연구들¹²⁾에 의하면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사회참여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정책인지도가 높으면 구성원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진다는 것임.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회인식이 고양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먼저, 하위층을 비롯해 각종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개발이 필요함. 또한 홍보소의 계층이 없도록 정책 정보를 받아들이는 도민들의 수준별 맞춤홍보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다음은 도 및 시군차원에서 사회적 이슈 및 정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임. 시장군수가 주민을 직접 만나는 모임을 열거나, 집단별 전화회의를 개최하거나, 혹은 SNS를 활용한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글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각종 사회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는 가정 하에 최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차별문제와 차별해소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사회계층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 하위층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요에 비해 심각한 정보의 빈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상위층이 사회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차별해소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과 상당히 대조적임. 따라서 차별해소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며, 나아가 다양한 계층별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12) 박서현·전희정. 2019.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8(1) 195-222;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연구』 17(4) 409-437.